

제 25-01호

2025. 02. 06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대응 방향

책임작성

정 윤 정 부연구위원

(044-960-5303 / yjung2@kosi.re.kr)

한 수 민 부연구위원

(044-960-5302 / smhan@kosi.re.kr)

KOS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Korea SMEs & Startups Institute

※ KOS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os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10대 이슈 선정 배경
2. 10대 이슈 선정 절차 및 결과
3. 10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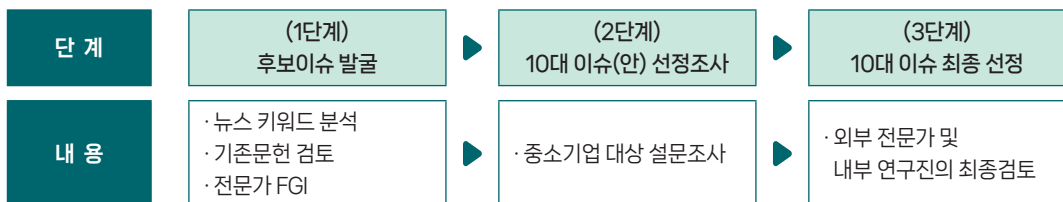
요 약

◆ (선정배경) 중소기업은 '25년 경제환경과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요국의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 24.11.24 ~ 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54.7%는 '25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전년('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하였고, 전년('24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32.4%),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13.0%)보다 높은 비중
 - '25년도 경영실적의 경우 '전년('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42.1%로 전년과 비슷(38.4%), 개선(19.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
- '25년은 경제성장 둔화와 주요국의 무역·통상정책의 변화, 환율 변동 등 다양한 대내외 환경 요인이 변화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생산과 수출, 경영 활동에 긴밀한 대응 필요

◆ (선정절차)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후보 이슈 발굴 → 전문가 FGI 및 중소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2025년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도출

표 1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선정 절차



1) 24.11.24 ~ 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 (선정결과)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특징으로 인력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필요

표 2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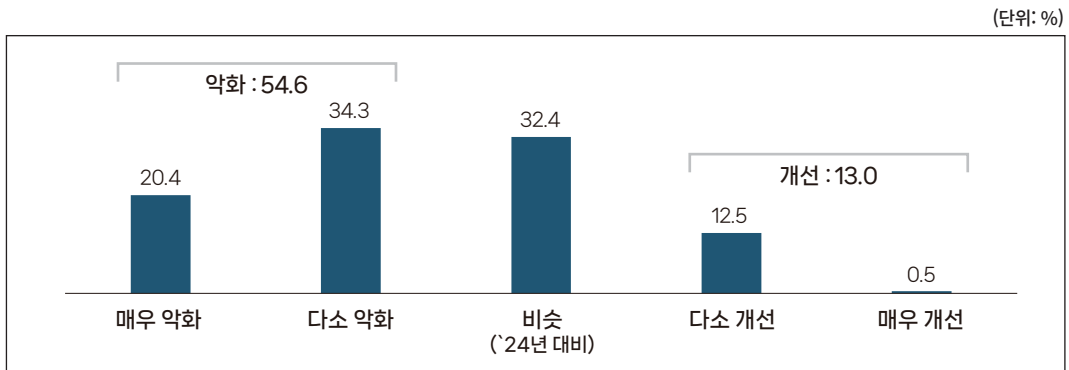
구 분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대응 방향
경영·경제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	· (중소기업)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분야의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 · (정부) 국가별 수출경합도 분석을 통한 전략 품목 지정 및 해외 新시장 진출 지원
	고환율과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 (중소기업) 환율 상승국면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노력 · (정부) 환변동에 따른 일시적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지원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 (중소기업) 자체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 투자 확대 · (정부) 혁신활동 지원 확대로 생산성 향상기회 제공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 (중소기업) 정부의 경영 정성화 지원사업 적극 활용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 · (정부) 회복가능한 한계기업 선별 및 만성적 한계기업 대상 구조조정 체계 마련
기술·환경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 (중소기업) 글로벌 환경정책과 수요 변동에 유연한 대응 방안 모색 · (정부) 글로벌 환경 규제 동향 관련 신속한 정보 제공 및 친환경 기술수요 감소에 대비한 수요발굴 지원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교육 등 투자 확대 · (정부) 대·중소기업간, 제조기업-유통기업간 신기술 도입을 위한 상생협력 추진 방향 구체화
정치·사회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속	·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력관리 지원 확대 및 기업환경 및 문화 개선 등을 위한 노력 강화 · (정부)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와 유지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의 인력 고령화	·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고 디지털숙련도 역량 강화 · (정부) 정년연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중소기업) 청년인력의 수요에 맞는 유연근무 확대 적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강화 · (정부) 중소기업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 등 다각적 방안 모색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 (중소기업)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 자원 적극 활용 등 혁신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정부)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지역기업 발굴 지원 확대

01 | 10대 이슈 선정 배경

◆ '25년 경제상황에 대해 중소기업은 전년('24년) 대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긍정 및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보다 높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 24.11.24 ~ 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 중 54.7%는 '25년도 경제 상황에 대해 전년('24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 응답
 - 전년('24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32.4%, 전년 대비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3.0%

그림 1 '25년 경제상황 인식 조사결과



* 5인 이상 중소기업 213개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수치는 반올림

◆ '25년은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주요국의 무역·통상정책의 변화, 환율 변동 등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

- 주요 경제기관들은 한국 경제성장률을 '24년 2.2% ~ 2.3% 수준에서 '25년 1.9% ~ 2.2% 수준으로 성장세 둔화를 전망
 - IMF: 2.2%('24) → 2.0('25) / OECD: 2.3('24) → 2.1('25) / 한국은행: 2.2%('24) → 1.9%('25) / KDI: 2.2%('24) → 2.0('25)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 지속과 환율 상승 추세 등, 대내외 다양한 환경요인의 변화 예상

◆ 중소기업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도의 10대 이슈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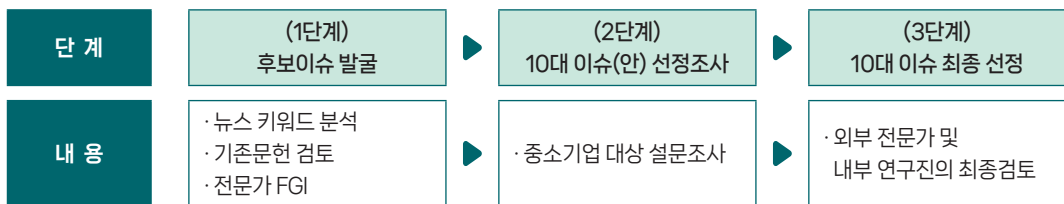
2) 24.11.24 ~ 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216개 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02 | 10대 이슈 선정 절차 및 결과

◆ (선정 절차) 3단계를 거쳐 '2025년 10대 이슈'를 선정

- (1단계) 뉴스키워드 분석 및 기존 문헌 검토, 전문가 FGI를 통해 분야별 이슈 후보 발굴
- (2단계) '24.11.24 ~ 12.3(6일간)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16개 결과를 활용하여 이슈별 우선순위 도출 및 평가
- (3단계)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연구진 논의를 통해 최종 10대 이슈 선정

표 3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선정 절차



◆ (선정 결과)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특징으로는 인력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중소기업 대응역량 강화 필요

표 4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구 분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참고) 2024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경영·경제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고환율과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
	-	중국발 경제리스크 확대
	기업 규모간 생산성 격차 지속	중소기업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한계기업 구조조정
기술·환경	글로벌 환경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탄소중립 국제규범 강화
	대·중소기업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글로벌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고도화와 AI 비즈니스 혁신
정치·사회	중소기업의 인력난 지속	제조 숙련인구 이탈
	중소기업의 인력 고령화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정책 패러다임 대전환

03 | 10대 이슈

(1) 세계 무역 분절화 지속

◆ (현황) 미국 및 EU 등 주요국의 자국 보호무역 기조에 따른 세계 무역 분절화가 지속될 전망

- (미국) 제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통상정책의 변화 예고(이효영, 2024)
 -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10 ~ 20%의 '보편적(universal)'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
 -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對中 무역 제재 강화
- (EU) EU의 그린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관세 부과 등의 정책 발표
 - 2024년 10월 29일 중국산 전기차에 7.8% ~ 35.3%에 해당하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강유덕, 2024)
 - 공공 조달에서 EU 내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 논의 (한아름, 2024)

◆ (영향) 중소기업에게는 국내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이 상존

- (부정전망)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뿐만이 아닌,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및 중국 내 경기 둔화로 인한 대중 수출이 감소 유발
 - 뿐만 아니라, 대중규제로 강화로 인한 중국 생산물량이 국내, 아시아 등으로 저가 유입됨에 따라 경쟁 심화 예상
- (긍정전망) 미국 정부의 對中 고관세 부과로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 기대

◆ (대응방향)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술 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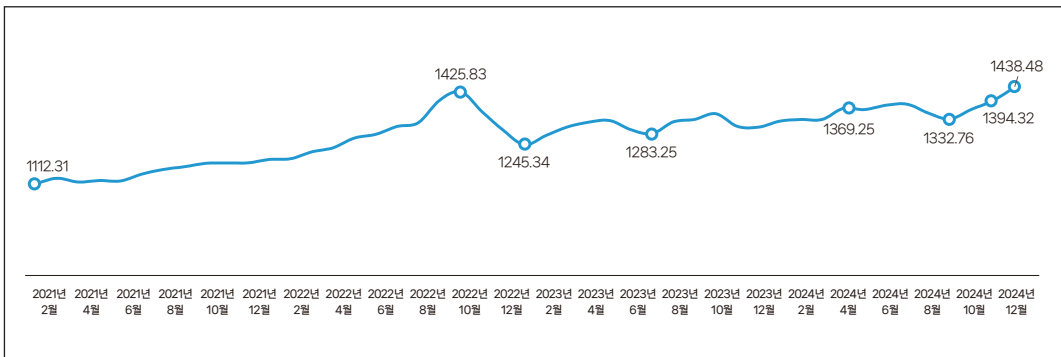
- 중소기업은 대미 한·중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고위기술, 첨단기술 분야에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야의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 필요
-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및 확대 어려움에 대비, 국가별 수출경합도 분석을 통한 전략 품목 지정 및 해외 新시장 진출 지원 확대

(2) 고환율과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 (현황) 원달러 환율이 '24년 11월 1,400원을 넘어서고, '24년 12월에는 1,450원대를 상회

- 원달러환율은 '24년 10월 2일 1,306.9원에서 12월 23일 1,450.3원으로 상승

그림 2 환율추이



* 자료: 한국은행

◆ (영향)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매출 개선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요소비용 및 물가상승 등 부정적 영향

- 환율 상승이 기업 수익성에 미치는 효과는 일반적으로 비용 측면(원가상승)이 수익 측면(매출증대)보다 큰 것으로 조사(한국은행, 2022)
 - 환율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매출 증대 효과가 더 크다는 기업은 34.3%인 반면, 원가 상승 부담이 더 크다는 기업은 42.6%

* 한국은행이 2022년 11월 10 ~ 30일 327개 대상 설문조사 결과

◆ (대응방향) 환율 상승 국면을 활용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환변동성의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 확대 필요

- 중소기업은 환율 상승 국면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개선 등의 기회 확보 필요
- 정부는 환변동에 따른 비용 상승에 따른 일시적 재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지원 필요
 - 납품대금 연동체 안착 지원 및 환변동보험가입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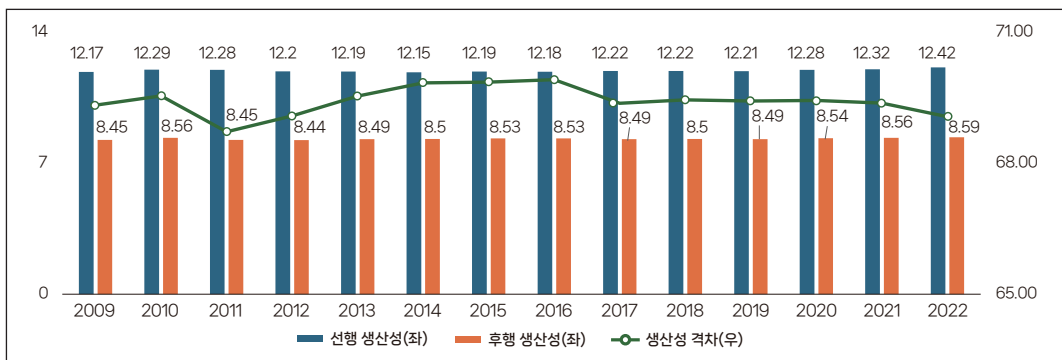
(3) 기업 간 생산성 격차 지속

◆ (현황) 중소기업 내 선행기업-후행기업* 간 생산성 격차 지속

* OECD(2020)를 참고하여 추정된 연도별 평균 총요소생산성의 분포를 기준으로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행그룹, 하위 40% 이내 기업을 후행그룹으로 정의

- '09년 기준, 후행 기업의 생산성은 선행기업 생산성의 69.43% 수준에서 '15년 70.03%까지 상승하였으나 '22년에는 69.16% 수준으로 하락

그림 3 연도별 중소기업 내 생산성 격차 추이



* 자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 (영향)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총요소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

- 선행기업의 시장 점유 확대, 기업간 임금격차 확대 등으로 선행-후행기업 간 경쟁 저하 우려 등, 중소기업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 가능 (최창호 외, 2018)

◆ (대응방향) 교육훈련 투자 및 기술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확대로 생산성 향상 유도

- 중소기업은 자체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원 교육훈련 투자 확대 필요
 - 중소기업 내 선행기업은 후행기업 대비 혁신역량 (기술직근로자 비중), 혁신활동 (교육훈련비)의 수준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 정부는 중소기업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감면, 금융지원 등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4)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와 한계기업 증가

◆ (현황)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며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나, 대내외 환경 불확실성으로 금융부담이 지속될 가능성

- '23년말 외감기업 중 한계 중소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 17.4%, 차입금 기준 31.9%로 증가추세
- '24년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2.69%로 지속적으로 상승추세
- 미국 신정부 출범, 통상환경변화, 고환율 등 경제·정치여건의 불확실성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영향을 주어 중소기업의 대출비용 부담 지속 가능

그림 4 연도별 한계기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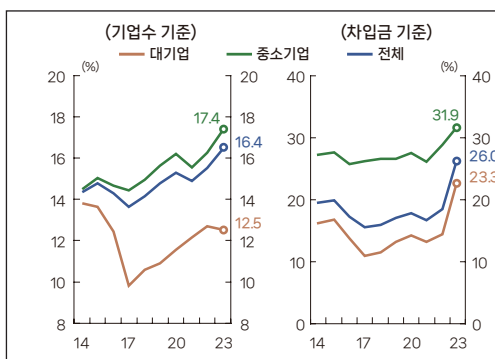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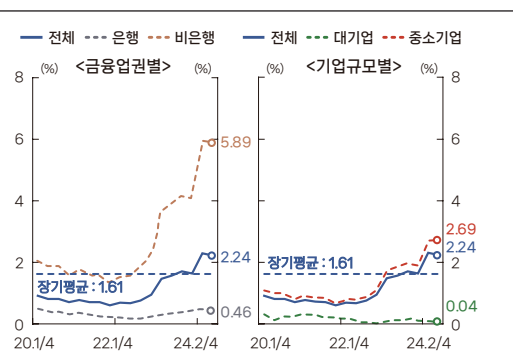


그림 5 기업대출 연체율



*자료: 한국은행(2024)

◆ (영향) 이러한 재무안정성 악화는 기업 비용 부담으로 가중, 채무상환악화가 우려되며 결국 한계기업 증가에 영향

- 한계기업 증가는 금융·인적자원 분배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고용, 생산성, 금융 환경 등을 악화
- 업종 내 한계기업 비중 10%p 상승시 정상기업의 매출액 증가율 2.04%p, 총 자산 영업 이익률 0.51%p,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0.26%p 하락 (한국은행, 2024)

◆ (대응방향) 회복가능한 한계기업 선별 및 만성적 한계기업 대상 구조조정 체계 마련

- 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등 정부의 경영정상화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유동성 위기 극복 노력 필요
- 정부는 만성적 한계기업 및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 등 기반 마련 필요

(5) 글로벌 환경 정책의 불확실성 확대

◆ (현황) 글로벌 탈탄소 규제가 확대됨과 동시에, 미국은 제2기 트럼프 정권에서 화석 에너지로 회귀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환경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 및 지배력 강화의 정책기조로 SMR 개발 등 원자력 발전 정책과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 철회 등의 정책 발표(오정석·황유선, 2024)
 - 연방 공유지에서의 시추 허용, 석탄 산업 규제 폐지 등 정책추진 예상
- 2024년 12월 1일 출범한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 2029년 핵심정책 의제를 발표하며 탈탄소화 및 그린딜 정책을 지속 추진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소, 산업 탈탄소화와 엑셀러레이터법(Industrial Decarbonization Accelerator Act) 출범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 및 기술 투자 등의 내용 포함

◆ (영향)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은 원가상승,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원자재가격상승) 친환경자재 및 에너지 활용 필요성 증가에 더해 미국의 원유 수입 요구 증대로 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
- (무역장벽심화) EU 중심의 탄소 배출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이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자국 생산 압력 강화 우려되어 수출기업의 애로 증가
- (주력산업애로) 친환경 자동차 대응기술 개발 필요성이 증대하나, 미국의 친환경 자동차 지원 정책 축소가 예상되며 수요 확산에 애로발생

◆ (대응방향) 정책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모색 필요

- 중소기업은 글로벌 환경 정책과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과 규제 관련 정보에 주목하고 수출 지역 다변화 등 전략적 대응 모색
- 정부는 중소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기술수요 저하 우려에 따른 적극적인 수요 발굴 및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필요

(6) 대-중소기업 간 신기술 도입 격차 확대

◆ (현황) '20 ~ '22년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신기술 기술 도입 활용에 대한 격차 확대

- 신기술 도입률 격차는 ('20) 12.1%p → ('21) 12.4%p → ('22) 13.1%p로 확대

표 5 기업규모별 신기술 기술 도입 비율 추이

(단위: %)

구 분	'20	'21	'22
중소기업 (5인 ~ 300인 미만)	11.1	12.1	11.9
대기업 (300인 이상)	23.1	24.5	24.9
대-중소기업간 격차	12.1p	12.4p	13.1p

* 자료: 통계청a, 각 년도

** 주: 신기술에는 AI, IoT, 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포함

◆ (영향) 중소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지연될 경우, 비용 절감 및 신시장 확보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기회 상실 우려

- 중소기업은 신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성장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기업 규모의 장벽 극복이 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OECD, 2021)
 -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결합하여 업무 기능의 자동화로 내부 가치사슬의 운영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기계 학습에 의한 데이터 탐색은 중소기업의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시장 정보의 비대칭을 감소시켜 제품 차별화 및 시장 세분화 역량 강화에 도움

◆ (대응방향)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간 상생협업 추진방향 구체화

- 중소기업은 경영활동에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교육 등 투자 확대
- 정부는 중소기업이 신기술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제조기업-유통기업간 상생협력 추진 방향 구체화
 - 신기술 도입 저해 요인으로 대기업과 거래종속에 따른 주도적인 디지털 기술 도입 한계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수요 저하 등이 꼽힘 (한국무역협회, 2023).

(7) 기업규모간 인력난 격차 지속

◆ (현황)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기업과의 격차 지속

- 중소기업(10 ~ 299인) 사업체의 산업기술인력부족률은 '20년부터 3.0% 수준으로 대규모(500인 이상) 0.4%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각 년도)
 - 중소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3.0%('20) → 3.0%('21) → 3.1%('22) → 3.0%('23)
 - 대규모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0.4%('20) → 0.4%('21) → 0.4%('22) → 0.4%('23)

◆ (영향)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는 근로자의 짧은 근속 기간과 잦은 이직에서 기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저하에 영향

- 기업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근속년수가 짧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수요도 중도퇴직자 증가가 가장 높은 비중
 - '23년 기준 기업규모별 근속년수는 10 ~ 29인(5.2년), 30 ~ 99인(5.9년), 100 ~ 299인(7.4년) 등 (고용노동부, 2024)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 채용의 사유로 중도퇴직자 증가(33.3%) 산업경기 개선(25.0%), 정년퇴직자 증가(16.7%) 순 (한국은행, 2024)
 - * 대기업은 산업경기개선(34.8%) > 중도퇴직자 증가(19.6%) > 정년퇴직자 증가(15.2%) 순
- 중소기업의 인재확보 애로와 높은 이직율은 중소기업의 성장 감소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김기희, 2015)
 - 중소기업 인재 확보의 애로와 높은 이직률 →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욕 저하 →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중소기업 성장 감소 → 중소기업 인재 확보 및 유지 애로 심화

◆ (대응방향) 중소기업의 인재확보와 유지를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

- 중소기업은 직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경력관리 지원 확대 및 기업환경 및 문화 개선 등을 위한 노력 강화
-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평가제도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기업 문화 개선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인력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8)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 (현황) 기업 현장에서 50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

- 중소기업의 고령자 비중은 '23년 47.8%로 '13년(37.1%) 대비 10.7%p 증가
- 대기업의 고령자 비중은 '23년 25.8%로 '13년 대비 8.7%p 증가

표 6 고령자(50세 이상)의 기업규모별 취업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13	'18	'23	증 감
중소기업 (5인 ~ 300인 미만)	37.1	41.8	47.8	10.7p
대기업 (300인 이상)	17.0	20.8	25.7	8.7p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노민선(2024)를 참고하여 재구성

◆ (영향) 기업 고령화 대응을 위해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기업 현장의 고령 종사자 증가는 작업 효율 감소 등의 우려

- (긍정적 측면) 이러한 정년 연장 논의는 중소기업에게 숙련인력 지속활용,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 등 실질적인 방법
- (부정적 측면)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 신규채용 감소에 따른 인력 운용의 경직성이 유발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 부족에 따른 작업 효율성 감소 우려

* 정보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 고령층(69.9%), 농어민(78.9%), 장애인(82.2%)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대응방향) 고령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디지털 전환 노력과 정년 연장에 대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 중소기업은 경영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직원들의 디지털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업무 역량을 강화지원
- 정부는 정년연장 도입 활성화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 근로자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에 기업부담 완화

(9) 청년 인력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현황)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자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선호도 또한 감소

- 청년(39세 이하)의 중소기업(5 ~ 500인미만) 취업 비중 추이: 45.1%('13) → 40.5%('18) → 37.1%('2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노민선(2024)를 참고)
- 청년(13 ~ 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감소한 반면 창업 등 자영업은 증가
(통계청b, 각연도)
 - 중소기업 선호 변화는 4.4%('21) → 3.6%('23)로 나타났고, 벤처기업은 2.4%('21) → 2.0%('23)로 감소
 - 자영업(창업)의 선호 변화는 13.5%('21)에서 15.8%('23)로 증가

◆ (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는 중소기업 인력난 심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연구개발 영역의 고령화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저해

- 중소기업의 연구원 중 39세 이하 청년 비중은 52.7%로 대기업 56.7% 대비 4%p 적은 비중

표 7 연령별 연구원 현황(2023)

(단위: %, 명)

구 분	29세 이상	30 ~ 39세	40세 이상	전체 연구원 수
중소기업 (5인 ~ 300인 미만)	17.4	35.3	47.3	213,038
대기업 (300인 이상)	15.0	41.7	43.3	142,216

** 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전담요원을 의미하며, 2023년 12월 31일 기준임

*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원자료

◆ (대응방향) 중소기업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부처 간 지원사업 연계로 정책지원 효과 제고

-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수요에 맞는 유연근무 확대 적용 등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 강화
- 정부는 청년 대상 인턴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과 중소기업 경영혁신 활동(예: 디지털전환)과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실습 기회 제공 및 고용과 연계 방안 마련

(10)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 (현황)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임금수준, 상장기업, 연구개발 투자 등 격차 점차 심화

- 상장기업 수 비중을 살펴보면 '24년 기준 수도권 73.2%, 비수도권 26.8% 비중
 - 상장 기업 수('24년 기준): 수도권 1,998개사 / 비수도권 730개사 (한국거래소)
- 수도권-비수도권 중소기업 월급여 격차 또한 ('20) 29만원에서 → ('23) 38만원으로 확대
-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수 등 연구개발 자원 대한 격차 지속적으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 수도권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19) 69.9% → ('22) 70.1%.비수도권 연구개발비 비중 변화: ('19) 30.1% → ('22) 29.9%
 - 수도권 연구원수 비중 변화: ('19) 65.2% → ('22) 66.9%비수도권 연구원수 비중 변화: ('19) 34.8% → ('22) 33.1%

◆ (영향)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는 지역 활력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

- 지역간 업종별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타지역 중소기업에 영향 (김성록 외, 2019)
 - 화학 연관 산업의 경우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남권, 동남권 간 파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
 - 금속제철 연관산업은 대경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고, 광물 관련 산업은 강원권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

◆ (대응방향)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지역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지역 중소기업은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대학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혁신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정부는 기존의 지역 주력산업에 기반한 기업 지원 체계에서 탈피, 성장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정 필요

참고자료

- 강유덕(2024), 「中 정부 보조금에 EU 본격 제재... 무역 갈등 가능성은」, 통상(2024.12), 151, pp. 22-25.
- 고용노동부(2024), 「기업체노동비용 조사보고서(2023년도 회계비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연구개발활동조사」(각 년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 김기희(2015), 「대전 중소기업 핵심인력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연구보고서 2015-02
- 김성록 외(2019), 「지역연계형 산업정책을 위한 산업구조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1-15.
- 노민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변화 추이 분석(2003~202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박가열 외(2023), 「중소기업 청년고용 실태분석」, 기본사업 2023-062, 한국고용정보원.
- 봉강호 외(2023), 「국내 인공지능(AI) 도입기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ISSUE Report, IS-164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4), 「2024년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 오정석·황유선(2024),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 이효영(2024), 「트럼프 귀환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과 국제 통상환경 전망」, IFANS Focus, November 13, 2024
- 최창호 외(2018), 「우리나라 기업간 생산성 격차 확대의 배경과 총생산성 및 임금격차에 대한 시사점」, BOK 이슈노트 2018-4호.
-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2023.12.14.)」
- 통계청(각연도 a), 「기업활동조사」.
- 통계청(각연도 b), 「사회조사」.
- 한국은행(2024), 「금융안정 상황(2024년 9월)」
- 한국은행(2022),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12월)」
- 한국무역협회(2023), 「국내외 기업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 비교와 시사점(2023.3)」
- 한아름(2024), 「폰 데어 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 :심화되는 美·中 경쟁 속 생존 전략」, KITA 통상리포트, vol. 13.

[외국 문헌]

OECD(2021),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SMEs.

[인터넷 자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http://data.krx.co.kr/contents/MDC/EASY/visualController/MDCEASY300.cmd>
(검색일: 2025.01.03.)



중소기업 이슈ⁿ 포커스

발 행 인 조주현

편 집 인 이동주

발 행 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707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s://www.kosi.re.kr>

인 쇄 처 디플러스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